

# 광주-인접 6개 시·군 '빛고를 광역경제권' 힘 모은다

### 광주시-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 공동 번영 업무협약 산업생태계 구축·광역SOC·문화관광·영상강물 개선 등 협력

광주시와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 등 6개 지자체가 '빛고를 광역경제권 시대'를 연다.

광주시는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빛고를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구복규 화순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김한중 장성군수, 안상현 나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및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첫 발걸음이다.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연대와 협력으로 빛고를 광역경제권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와 인접 6개 시·군은 통근통학인구 연간(인5천여명)으로 반경 30km 이내 위치한 반나절 생활권이다. 주거, 일자리, 문화·소비, 쇼핑 등 공동생활권이 형성돼 있어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경우 경제활성화 및 시너지에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분산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산업 생태계 구축 ▲단일생활권을 위한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 ▲즐거우고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한 영상강 맑은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이다.

이번 상생 협약은 강 시장이 인접 시·군의 경쟁력을 키우고 도시 간 연결·연합을 통한 '빛고를 광역경제권'으로 성장



광주시는 2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인접 시·군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구복규 화순군수, 이병노 담양군수, 안상현 나주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이상익 함평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김한중 장성군수.

장기 위해 지난 2년 간 지속적으로 시·군수와 개별 간담회 등을 가지며 상

생협력 과제를 발굴한 결과다. 협약식에서는 상생협력을 위해 발굴

된 4개 분야(산업, 광역교통, 문화관광, 환경생태) 23개 과제에 대한 추진 경과

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와 인접 시·군은 이날 만남에서 추가적인 논의 사항으로 나온 장사 시설 이용료 감면, 동북호 상수원 보호 구역 재조정, 광주 삼도-함평 나산 광역도로, 첨단연구개발특구 진입로 개설, 장성 로컬푸드 2호점 개장 등에 대해서도 추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인접 6개 시·군은 현안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해 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상호 공유하며 사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인구 감소 위기에서 광주가 커지려면 전남과의 상생은 절대적이고 초광역 협력을 이루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며 "에너지신산업, 광역철도 기반시설(인프라) 등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과 손을 맞잡고 서남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강기자

## “국립의대 유치 도민 역량 모아야” 호소

### 도동부본부 “과도한 경쟁 자제” 촉구...순천 사회단체는 공모 철회 요구

순천지역 사회단체가 2일 '서부권을 위한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전남도 동부지역본부는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도민 역량을 하나로 모으자"고 호소했다.

이날 순천지역 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공모 방식은 도의 위권행위이자,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며 객관성·공정성이 담

보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동부지역본부는 호소문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전남도의 발표에도 지역 상생의 길은 모색하지 않고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도민과 관련 기관·

단체에서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부본부는 "정부 요청에 따라 전남도가 '정부 건의를 추진하는 절차'로서 법률 자문 결과 적법·타당하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공모 방식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동부본부는 또 "정부에서 각 관련 부처가 함께 검토해 가장 강력한 정부 답변 형태로 전남도에 요청했는데도, 다시 정부에 대한 선정을 넘기면서 시간을 허비하면 의대 신설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동부본부는 "정부 요청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용역 추진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찬균 동부지역본부장은 "은 도민이 30년간 간절히 기다려온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확실한 단초가 마련된 지금,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며 "동·서 화합과 단결을 통해 도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 내년 의대 증원 1천500명 안팎 될 듯

### 국립대 9곳 '증원분 50%'·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 100% 모집

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 32곳 가운데 31곳이 내년 모집인원을 확정하면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1천489~1천509명으로 정해졌다.

내후년인 2026학년도에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증원 규모가 2천명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2일 공개했다.

여기에는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31개 대학이 포함됐다. 다만 차이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아직 모집인원도 확정되지 않아 이번 취합 대상에서 빠졌다.

증원분이 반영된 31개 의대의 내년도 증원 규모는 총 1천489명이다.

모집인원을 결정하지 않은 차이과대학(현 정원 40명)의 경우 증원분이 40명인데, 증원분의 최소인 50%(20명)만 뽑을 경우 전체 의대의 증원분은 1천489명이 된다. 차이과대학이 증원분의 최대인 100%(40명)을 모두 모집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의대의 증원분은 1천509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모집인원은 현재 3천388명에서 최소 4천517명, 최대 4천557명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모두 증원분의 50%만 모집한다.

강원대는 42명을 늘려(당초 증원분 83명) 91명, 충북대는 76명(증원분 151명)을 늘려 125명을 모집한다.

경북대와 충남대는 각각 45명(증원분 각 90명)을 늘려 135명씩 모집한다.

경상국립대는 62명(증원분 124명) 증가한 138명, 전북대는 29명(증원분 58명) 늘어난 171명, 제주대는 30명(증원분 60명) 늘어난 70명을 선발한다.

부산대와 전남대는 각각 38명(증원분 76명) 늘어난 163명을 뽑기로 했다.

반면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모두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인원을 확정해 제출한 22개 사립대 가운데 증원분을 감축해 모집하기로 한 곳은 단국대(천안)·성균관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 등 5곳뿐이다. /연합뉴스

## 전남권 의대 신설 정원 200명 전의

〈2026학년도〉

### 도, 대통령실 등에 '공모 방식 추천 대학 선정' 설명

전남도는 2일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전남 공문을 제출, '2026학년도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 배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공문에서 정부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을 발표하고 전남도에서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해 대학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

라 공문을 제출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 추진을 위탁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한 용역은 대학 설립 방식 결정

과 대학 평가 기준 마련, 최종 평가 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 4~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9~10월께 추천 대학 선정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또 '정부가 요청한 대학 추천 절차를 원활하게 잘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5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2026학년도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재정기자

**광주매일신문**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정인길(630319-1\*\*\*\*\*)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28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종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4년10161 상속한정승인

○공고 안: 정유주

○한정승인수리일: 2024년 4월 30일

○공고기간: 2024년 5월 3일 ~ 2024년 7월 3일

○연 락 처: 인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제3기숙사 에이동 828호 (송도동) (010-2624-0930)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주성일(721105-1\*\*\*\*\*)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28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종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4년3499 상속한정승인

○공고 안: 주태연

○한정승인수리일: 2024년 5월 1일

○공고기간: 2024년 5월 3일 ~ 2024년 7월 3일

○연 락 처: 광주 북구 설죽로455번길 10-15, 202호 (상가동) (010-7143-820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4-46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광양세종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광양세종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광양세종일반산업단지  
○ 위 치: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종리 일원  
○ 면 적: 2,426,756㎡

2. 광양세종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 사업기간: 기정) 2010년 ~ 2025년 → 변경) 2010년 ~ 2030년(증 5년)  
○ 사 업 비: 기정) 6,005억원 → 변경) 7,081억원(증 1,076)  
○ 시행방법: 기정) 민간사업개발 → 변경) 민간개발+공공개발

구분	계	국비	지방비	민자/외자
기정	6,005	783	138	5,084
변경	7,081	438	294	6,349
합 계	13,086	1,221	432	11,433
민간사업개발	2,948	172	-	2,776
공공사업개발	4,133	206	294	3,573

○ 사업시행자 변경

구분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대표자	비고
민간개발	세종산업개발(주)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77, 2층 2호	박 약 준	
공공개발	전라남도지사(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지사	내부 건선도로
민간개발	세종산업개발(주)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77, 2층 2호	김 호 열	민간개발
공공개발	전라남도지사(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지사	공공개발(민간+공공 포함)

3.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4. 5. 3. ~ 2024. 5. 16.)  
나. 공람장소: 광양청 산단조성과, 광양시 투자경제과, 산단택지과  
다. 공람내용: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광양세종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4.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2024. 5. 3. ~ 2024. 5. 16. (공람기간 내 제출)

나. 제출방법: 의견이 있을 경우 가까운 공람장소에서 의견서 제출(별도양식 없음) 5. 기타  
가.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 ☎(061-760-5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시행주체별 토지이용계획(별첨) 1부.  
□ 불임 사업시행주체별 토지이용계획  
○ 사업시행주체별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민간개발	민간+공공		
합 계	2,426,756.0	917,984.7	68,623.3	1,440,148.0	100.0
소 계	1,670,905.8	550,385.8	48,401.0	1,072,119.0	68.9
산업시설용지	1,487,209.3	520,390.3	-	966,819.0	61.3
연구시설용지	5,572.3	5,572.3	-	-	0.2
물류시설용지	91,170.0	-	-	91,170.0	3.8
상업·업무용지	75,294.5	18,928.5	42,236.0	14,130.0	3.1
주택건설용지	11,659.7	5,494.7	6,165.0	-	0.5
주요시설용지	755,850.2	367,598.9	20,222.3	368,029.0	31.1
공 원	96,079.8	69,662.8	-	26,417.0	4.0
완충녹지	57,724.0	4,399.0	-	53,325.0	2.4
연결녹지	9,512.0	6,553.2	2,958.8	-	0.4
경관녹지	115,983.1	64,839.1	4,960.0	46,184.0	4.8
도 로	410,035.6	202,657.1	7,880.5	199,498.0	16.9
주 차 장	32,888.0	7,488.0	4,423.0	20,947.0	1.3
변 전 소	4,629.7	4,629.7	-	-	0.2
오수중계펌프장	3,559.0	-	-	3,559.0	0.1
폐수중발처리장	7,370.0	7,370.0	-	-	0.3
폐기물처리시설	18,099.0	-	-	18,099.0	0.7

○ 사업시행주체별 토지이용계획도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가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